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330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부터 2004년 귀속 주민세(종합소득)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2023년 11월 기준 구체적 체납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개별 지방세는 표 연번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

연번	부과년월	과세번호	과세내역	부과액	가산금	합계	최초납기일	분할납부액 (‘16.3~’20.7)	현 체납액
총계				27,389,790	20,693,470	48,083,260		22,538,420	25,544,840
1	2003.09	B	주민세(종합소득) 2003.5월 확정신고분 (2002귀속5)	731,610	528,510	1,260,120	2003.9.30.	1,038,420	221,700
2	2004.02	C	주민세(종합소득) 2003.11월 수정신고	1,013,610	768,120	1,781,730	2004.2.29.	1,500,000	281,730
3	2004.07	D	주민세(종합소득) 2004.5월 결정 (2002귀속)	1,641,960	1,244,390	2,886,350	2004.7.31.	2,000,000	886,350
4	2004.12	E	주민세(종합소득) 2004.9월 종합소득세 (2003귀속)	878,450	665,780	1,544,230	2004.12.31.	0	1,544,230
5	2005.02	F	주민세(종합소득) 2004.5월 종합소득세경정	13,764,050	10,432,640	24,196,690	2005.2.28.	16,500,000	7,196,690
		G	(주민세 과소, 추가고지)						500,000
6	2005.02	H	주민세(종합소득) 2005.1월 종합소득 (2002년)	6,420,120	4,866,440	11,286,560	2005.2.28.	1,500,000	9,786,560
7	2008.11	I	주민세(종합소득)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70	710	24,580	2008.11.30.	0	24,580
8	2008.11	J	주민세(종합소득)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6,120	2,186,880	5,103,000	2008.11.30.	0	5,103,000

나. 피고의 위임을 받은 ○○시 ○○구청장은 이 사건 지방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지방세 채권의 납기일 중 가장 늦은 날짜인 2008. 11. 30. 이후까지 존속하였거나 그 이후 이루어진 체납



압류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개별 압류처분은 표 연번으로 특정한다).

연번	종류	물건내역	압류일	압류해제일	제3채무자	비고
1	예금	(계좌번호 1 생략) [K] 예금	2005.11.23	2013.04.15	L조합	
2	예금	(계좌번호 2 생략) 예금	2007.06.13	2013.04.15	우체국	
3	예금	M	2009.06.23	2009.09.21	N	
4	예금	O P Q	2010.03.10		O	별지목록 순번1
5	예금	R은행	2014.01.22	2014.03.24	R은행	별지목록 순번2
6	예금	S은행	2014.01.22		S은행	별지목록 순번3
7	예금	T은행	2014.01.22		T은행	별지목록 순번4
8	예금	U	2014.07.10		V	별지목록 순번5
9	동산	압류보증인 동산 : TV, 에어컨 등 8점 압류점유 동산 : 루이비통지갑 등 총 12점	2023.06.2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5 내지 7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참조).

나. 제5 내지 7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해제 압류처분'이라 한다)은 2014. 3. 24. 해제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그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해제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에 따라 현재 이 사건 지방세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하였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존속 중인 압류처분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는 이상, 이 사건 해제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이 없다]

3. 제4, 8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4 압류처분은 기본계약이 실효되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고 제8 압류처분은 이 사건 지방세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 이루어진 압류이므로, 모두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4 압류처분에 대하여

가)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참조).

나)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3. 10. 원고가 주민



세 등 60,446,950원을 채납하였음을 이유로 O에 대한 보험계약(P보험) 관련 채권을 압류한 사실, 원고는 2003년 12월경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보험료를 미납하여 그즈음 위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제4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단지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실효될 뿐이다. 제4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8 압류처분에 대하여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0. 3. 10. 제4 압류처분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한다. 제8 압류처분은 그로부터 5년 내인 2014. 7. 10. 이루어졌으므로, 시효소멸 뒤의 압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8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원고는 이 사건 지방세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결손처분(지방세징수법이 2022. 1. 28. 법률 제18794호로 개정되면서, '정리보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뿐더러,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채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채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결손처분 취소, 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1)]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2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제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정○○

1) 구 지방세징수법(2022. 1. 28. 법률 제18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항에 규정된 결손처분 취소 시 납세자에 대한 통지의무 조항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2

(별지1)

목록

순번	압류번호	압류물건	압류설정일	압류해제일
1		[] 보험 예금([])	2010. 3. 10.	
2		[] 은행] 예금	2014. 1. 22.	2014. 3. 24.
3		[] 은행] 예금	2014. 1. 22.	2014. 3. 24.
4		[] 은행] 예금	2014. 1. 22.	2014. 3. 24.
5		[] 예금	2014. 7. 10.	



(별지2)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節에서 “地方稅徵收權”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30조의6 (시효의 중단 및 정지)

-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③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끝.